

정선 알파인경기장 숙소 착공

도, 실시계획 승인 2017년말 완공목표

정선 알파인경기장 숙소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강원도는 지난 26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 내 숙소 건립을 위한 올림픽 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현대

산업개발이 27일 정선군에 숙소 건립공사를 시작하는 착공계를 제출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송담아이엔씨는 내달중으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과 인접한 북평면 속암리 일원 총 2만9294㎡에 조성되며 2개 사업자가 전액 민자사업으로 숙소를 건립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하 2층~지상 12층, 204실 규모로 숙소를 건립하며, 송담아이엔씨는 지하 1층~지상 5층, 108실 규모로 신축한다. 두곳 모두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564실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사업자들은 올림픽 개최 후 경기장 사후활용계획과 연계해 추가 사업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백오인

하도급정책 여전히 '일방통행'...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겨

〈일사업자-수급사업자〉

건설분야 하도급 정책이 여전히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업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이 완료될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하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등 원사업자에게 부담 전가 균형발전 기본원칙 못지켜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수급사업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게 하도급법 개정 추진 배경이다.

정부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상 금융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차별 계약이 동반 완료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자신의 계약이행 완료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받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법 보호를 받는 수급사업자의 범위 조정도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법 적용 면제 범위를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추이를 감안해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을 2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수급사업자 측의 반대로 흐지부스됐다.

반편을 들어선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 200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은 완화한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위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는 물론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

진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조항을 넣어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강제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안전의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확립 가능하다"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